

“전주에 드론산업진흥원 유치”

민주 김윤덕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24일 드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드론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현행법이 제정됐고 2018년 704억원 규모였던 국내 드론시장은 오는 2024년 8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윤덕 의원

민주 김윤덕 의원은 드론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의 지원 등 드론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드론산업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매김할 것으로 이제 국가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진흥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전주는 드론핵심산업인 탄소, 수소산업 등과 산업연계가 가능해 최적의 장소이므로 법을 통과시키고 전주에 드론산업진흥원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에, 김 의원은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드론시스템 기술혁신을 위한 연



“초코파이 먹고 투표 꼭”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초코파이 빵에 기표문양을 새겨 전시 판매하고, 투표 참여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가 제시한 정책 도정 반영 힘쓸 후보”

도내 청년농업인 1111명 김관영 도지사 후보 지지 정책협약식·간담회 개최

전북도 미래먹거리 선도 공약의 중심에 있는 청년농업인 1111명이 지난 23일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지지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후보 캠프에서 김관영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정책협약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관영 후보와 청년농업인들은 △청년농업인인 농업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실천하기로 했으며, 또한 △지역 내 농업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및 지원사업 확대 노력, △청년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최한국 청년농업인 대표는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우리가 제시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김관영 후보를 지지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김관영 후보가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후보는 “전북도를 농생명 수도로 만드는 것이 전북도지사의 책무다. 전국의 농업과 관련된 인재들이 전북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농업인이 중심이 돼 이곳 전북도에서 같이 성공스토리를 써 내려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롯해 청년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오늘까지 조사한 결과는 가능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와

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와 공표금지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24일 전북대학교를 찾은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후보 “청년일자리 해결 총력”

전북대 찾아... 사전투표 독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24일 전북대학교를 방문,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청년일자리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김 후보는 대학로를 순회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 고민이 많은 청년들과 만남과 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전북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

아 고향을 등지지 않고 정착할 수는 전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제조 공약인 대기업 계열사 5개를 유치해서 전북지역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관영 후보는 전북벤처기업회 12개 전북도 장애인단체, 전북다문화가정 단체와 정책 협약을 갖고 주요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유호상 기자

조선분야 탄소중립 성장기반 확보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 전북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

전북도가 산업부 공모사업에서 국비 100억원을 확보해 조선분야 탄소중립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4일 산업부 2022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미래기술선도형) 공모에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조선해양기체연구원 전북본부(본부장 조인호)가 참여해 될 이 사업은 총예산 170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앞으로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저탄소 및 무탄소 대체연료 선박 관련 연구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전북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조선분야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인프라인 실증플랫폼을 선점함으로써 지역 조

산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LNG, LPG 바이오디젤 및 암모니아,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대체연료별 연료 저장설비, 공급장치 및 제어시스템 등 장비 24종을 구축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 엔진 4대 핵심기술인 △엔진 성능평가, △하이브리드 배터리 및 모터 기술, △연료액화저장 기술, △연료 공급 기술 등에 대한 시험평가 설비를 구축도 병행한다. 대체연료 엔진 10대 핵심 부품 기술에 대한 실증 기반도 함께 구축하며, 이 모든 장비 및 실증기반은 3층 규모의 시험 연구동(건축면적 399평)에 담을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친환경 선박관련 핵심기자재 실증을 위한 전주지역 지원 인프라를 확보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중인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군산) 내에 1.6MW급 듀얼퓨얼(디젤+LNG) 엔진 및 각종 측정 장비 구축을 완료했다.

또, 지난해 시작된 ‘무탄소 적용 가능 엔진 및 핵심기자재 실증 기반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연료의 저속·중속 엔진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육상 시험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까지 연계되면 친환경 대체연료와 관련된 저속·중속·고속 엔진 등 모든 엔진의 실증이 가능하게 돼 국내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북도는 친환경 선박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실증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친환경선박산업의 성장기반을 선점함으로써 지역 조선산업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첫 출마하는 2030세대 청년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첫출마지원단이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버스킹존에서 유세를 펼쳤다

‘청년 정치, 청년이 직접’

지선 첫 출마 청년 후보자 지원 ‘첫출마지원단’ 전북대 버스킹존서 유세... 투표 참여·지지 호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첫 출마하는 2030세대 청년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첫출마지원단이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버스킹존에서 유세를 펼쳤다.

지난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들신대위원장이었던 전주시 아지역 구(진북, 금암·2동, 인후·2동) 최서연(26) 후보를 비롯해 김세희(전주시 비례, 29), 이성국(전주시 사, 28), 신유정(전주시 타, 22) 후보가 유세에 참여했다.

최서연 후보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면서 “선거

때면 소환되는 이벤트성 청년 정치가 아닌 청년이 정치의 주체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는 투표 참여다. 청년, 여타분들의 적극적인·지지와 응원을 필요하다”며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신유정 후보는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가 바뀌어야겠다”면서 “우리 동네 골목투어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역과 청년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 우리가 살고있는, 살아갈 지역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자체등급분류 제도 사각지대 없어지나

민주 양경숙 의원, 게임산업 일부개정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에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다. 자체등급분류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하는 것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위원회가 직접 사전 심의를 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과 청소년계급제공급, 일반계급제공급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윈스토어 등을 포함한 총 10개 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개발사에 해당 앱에 관한 설명을 해 등급을 매긴다. 개발사가 스스로 해당 앱에 대한 해당사항을 체크하면 앱마켓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분류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유통되는 게임물들의 사물관리를 책임진다. 등급이 잘못 분류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 결정 거부 및 취소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등급재분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지해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의 처분을 내린 후 다시 유효한 등급분류가 이뤄질 때까지의 공백이다.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한 경우, 원칙상 앱 마켓에서 게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안되는 불법게임이지만, 기존 이용자들도 이용은 가능하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절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유효한 등급 분류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게임물의 유통이 용이하게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담았다.

또,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유호상 기자